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1/3 통권 1656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세계화 속의 차이나 쇼크(2)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CF0·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비과세되는 소득의 파악이 연말정산의 출발점이다
-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 '24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탄력세율 운용방안
-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 대형(Big4)회계법인과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 시 기업의 체크포인트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파견법에 규정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경우는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작성일자〉

| 수정발급사유 | 작성방법 | 작성일자 | 수정발급기한 |
|-----------------------------|--|--------------------|-------------------------------------|
| 재화의 환입 | 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붉은색 글씨나 △표시) | 실제 환입일 | 사유발생시 (다음달 10일까지) |
| 계약의 해제 | 당초 발행금액에 (-)세금계산서 발급(붉은색 글씨나 △표시) | 계약해제일 | 사유발생시 (다음달 10일까지) |
| 계약의 해지 | 공급가액에 증감발생시 (+)나 (-)세금계산서 발급(검은색 글씨나 붉은색 글씨 등) | 증감사유 발생일 | 사유발생시 (다음달 10일까지) |
| 내국신용장의 사후개설 | 당초 발행분에 (-)세금계산서 발급(붉은색 글씨나 △표시)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검은색 글씨)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내국신용장 등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발급시 |
| 필요적 기재 사항의 착오기재 | 당초 발행분에 (-)세금계산서 발급(붉은색 글씨나 △표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발급(검은색 글씨) | | 사유발생시 (다음달 10일까지) |
| 필요적 기재 사항의 착오외 기재 변경 | | | 동일 과세기간 확 정신고기한 후 1년 까지 |
| 착오이중발급 | 당초 발행분에 (-)세금계산서 발급(붉은색 글씨나 △ 표시) | | 사유발생시 (다음달 10일까지) |
| 세율 잘못 적용 | 당초 발행분에 (-)세금계산서 발급(붉은색 글씨나 △표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발급(검은색 글씨) | | 사유발생시 (다음달 10일까지) |
| 면세 등 발급 대상 아닌 거 래의 수정 | 당초 발행금액에 (-)세금계산서 발급(붉은색 글씨나 △표시) | | 사유발생시 (다음달 10일까지) |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 ▶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56호 / 주간 1호

2024. 1. 3. (수)

·발행인: 이윤선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작성일자 | 표지 |
| C E O 에 세 이 | 세계화 속의 차이나 쇼크(2) | 2 |
|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 미국인에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3천불 기준 관련 문의 - 중식비 소급 지급시 비과세 가능 여부 - 법인차량 장기렌트관련 문의 -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4 5 |
| 눈에맞는 절세미인 | 비과세되는 소득의 파악이 연말정산의 출발점이다 | 6 |
| 매일 절세 재무요점 | - 2023년 소득세 공제한도 - 확대되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 | 8 9 |
| 직장인 Survival | 인간관계에 강해지는 법 6가지 | 10 |
|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130, 2023.05.17)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소득-307, 2023.05.25) | 11 12 |
| 세정뉴스와 해설 | 쉬워지는 양도세 신고... 토지양도까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13 |
| 마케팅 Tax consulting | 파견법에 규정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경우는 세액공제 적용되지 아니함 | 11 |
| 세무정보 | -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 '24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탄력세율 운용방안 | 14 30 |
| 회계정보 | -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 대형(Big4)회계법인과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시 기업의 체크포인트 | 32 41 47 |
| 세무환율정보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 3 |

세계화와 차이나쇼크(2)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오래전 미국 뉴욕 심장부인 무역센터 쌍둥이빌딩이 비행기 테러를 당했다. 동독과 소련을 붕괴시키고 중국까지 개혁개방으로 미국을 닮아가기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 판에 된 통 얻어맞았다. 그러나 미국이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것은 이해할 만하다. 1980년대 일본이 뉴욕빌딩을 사재기하고 헐리웃의 영화사를 삼켰을 때보다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노발대발 핏대를 올려가며 방위능력 의지도 능력도 없는 아프가니스탄을 한방 먹였다. 쌍둥이 빌딩 테러주범을 응징하고 죽이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돌산들을 최신에 폭탄으로 융단폭격을 가했다. 애꿎은 아프가니스탄에 불쌍한 난민과 사상자를 냈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 청년들을 사막에서 헛고생 시켰을 뿐이다. 왜 전쟁을 일으켜 세계인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지 궁금했다. 그런 것을 보면 미국은 아니 미국 수뇌부는 허공에 대고 화풀이를 친 셈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친 김에 꼴통 부시 정권은 이라크를 적으로 삼았다. 후세인을 이라크의 지도자로 만들어 줄 때는 언제고 독재자 후세인을 응징하여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은 무엇인가.

후세인을 처치하고 전쟁을 끝냈다고 선언한 지 오래지만 아직도 이라크는 평정되지 않았다. 대형 살상무기 정체도 찾지 못했고 이라크를 해방(?) 시켜주지도 못했다. 오히려 현지인과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또 전운만 키웠다.

그래서 평화와 건설을 위한 한국의 파병도 고민거리가 됐다. 미국과 이해관계 때문에 파병을 약속한 각국이 파병을 철회하거나 심각한 재고에 들어가곤 했다. 게다가 포로의 잔인무도한 학대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 수뇌부는 세계 각국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 청문회에서 럽스펠트 미국방장관은 언론에 유포된 포로학대 사진보다 더 잔혹한 사진이 있음도 인정했다. 이라크에 주둔한 미국 내에 조직적이고도 치사한 포로학대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라크 전쟁을 지휘한 책임자 국방장관으로서 그의 자리는 위태롭기는커녕 더욱 공고해졌다고 그는 뻔뻔하게 장담했다. 세계의 비난과 야유는 아랑곳 할 필요가 없었다. 그만큼

초강대국 미국의 힘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미국인 60%이상이 대 이
 라크 전쟁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니 미국은 집단적으로 미쳤다고 할 수 있었다.

사실 후세인 독재에 괴로움을 당하던 이라크 국민 해방은 전쟁목적이 아니었다. 당초부터 미
 국으로서는 석유를 탐낸 전쟁이었다. 그러기에 미국인들도 모두 한 통속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더 많은 식민지 확장에 도취했던 로마인들과 같았다. 이런 것들이 세계평화를 명분으로 한 팩스
 로마나(Pax Romana)처럼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단면이었다.

이것이 세계화의 단면이기도 하다. 로마는 더 큰 외세에 의해 망하지 않았다. 스스로 미쳐서
 붕괴했다. 집단적 최면에 의해 잔인해지고 환락적 소비를 즐겼다. 거의 오로지 미국만이 선진국
 이라고 믿는 미국지상주의자들의 환상을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수십 년간 우방이면서도 결코
 한국의 미국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을 위해 미국은 행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
 국을 배타하거나 내 몰 한국현실은 더욱 아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 | | | | | | |
|--|---|---|-----------|----------------|----------------|----------------|----------------|---------|
| 통 화 명 | | | | 12월 22일 (금) | 12월 26일 (화) | 12월 27일 (수) | 12월 28일 (목) | |
| 미 | 달 | 러 | (USD) | 1303.80 | 1300.70 | 1296.80 | 1294.40 | |
| 일 | 본 | 엔 | (JPY) | 917.59 | 914.63 | 911.15 | 914.16 | |
| 영 | 국 | 파 | 운 드 | (GBP) | 1653.87 | 1652.67 | 1650.57 | 1657.16 |
| 캐 | 나 | 다 | 달 러 | (CAD) | 981.63 | 981.22 | 982.91 | 980.16 |
| 홍 | 콩 | 달 | 러 | (HKD) | 166.94 | 166.55 | 166.09 | 165.71 |
| 중 | 국 | 원 | (CNH) | 182.39 | 181.85 | 181.45 | 181.04 | |
| 유 | 로 | 화 | (EUR) | 1435.29 | 1433.50 | 1432.19 | 1437.75 | |
| 호 | 주 | 달 | 러 | (AUD) | 886.39 | 885.71 | 885.65 | 886.60 |
| 싱 | 가 | 폴 | 달 러 | (SGD) | 982.81 | 982.18 | 979.97 | 980.75 |
| 말 | 레 | 이 | 시 아 링 기 트 | (MYR) | 280.06 | 280.81 | 279.54 | 279.63 |

미국인에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3천불 기준 관련 문의

Q

미국인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 5천불인 경우

1. 조세조약에 따라 연간 3천불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및 지방소득세) 22%를 징수해야 하는데 이때 22%의 세율을 총 지급액인 5천불 전액에 적용해야 하는지, 3천불 초과분인 2천불에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항공료 실비를 추가로 미국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지급액에 포함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A

1.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지급액에 22% 이므로, 전체 5천불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항공료 실비 등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중식비 소급 지급시 비과세 가능 여부

Q

중식비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7월에 1~6월분의 중식비 인상금액 10만원*6개월 = 60만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면 해당 금액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식대 비과세항목은 월별금액 기준이므로 일괄 소급적용은 안되며, 소급 적용하려면 상반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차량 장기렌트관련 문의

Q

법인차량 장기렌트(5년)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법인차량 월 렌트료 계정과목?
2. 월렌트료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유.무? (7인승카니발)
3. 연간 경비처리 한도액? (렌트비,유류대,수선비등)

A

1. 렌트료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매월 렌트료의 경우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취득 및 유지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렌트차량이 1,000cc 미만 또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만 업무용차량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연간 경비처리는 전체운행거리에서 실제로 업무용으로 운행거리만큼의 비율대로 경비처리(운행기록작성)가 가능하며,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연 1천5백만원이 한도입니다.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외국인 연말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0년 9월에 퇴사한 외국인 직원으로 2021년 7월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직원에게 지급 한 후 본인에게 지급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는 이 지급액 대하여 해당 귀속분의 원천세 신고 및 소득세 납부도 정상 완료 하였습니다.

이 외국인 직원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시기에 근무한 직장에 이 추가 소득에 대하여 전달하지 않았고, 이 회사도 외국인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내국인 연말정산과 달리 외국인 연말정산은 본인 비용이 아닌 회사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회사도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종전 회사의 추가 소득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 하지 않고 종전 회사의 소득을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신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추가 소득을 2021년 연말 정산때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가산금 통지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퇴사한 외국인 직원 및 당시 외국인이 근무한 회사는 추가 소득에 대한 가산금을 저희가 소득 원천지이므로 가산금의 반을 부담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말 정산때 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저희가 가산금의 반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A 연말정산오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책임이 있으나, 직원이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라면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귀사가 퇴직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라면 귀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산금에 대한 귀책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과세되는 소득의 파악이 연말정산의 출발점이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소득세는 특정기간에 발생한 다양한 사건에 대해 각 납세자의 개별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측정이나 세금계산을 위한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므로,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체계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없다.

연말정산은 한해의 근로소득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자신의 과세소득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다. 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올해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출발이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근로소득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경우의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중 대표적인 것은 일직이나 숙직을 하고 받는 수당 및 여비인데,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해 시내출장 등 업무 수행을 하고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반드시 근로자 소유의 차량이어야만 하며, 회사차로 업무 수행을 하고 받은 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이다.

선생님들은 연구보조비나 여가활동비로, 기자는 취재수당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인터넷 신문기자들도 월 20만원까지 활동비 수당을 비과세로 적용받는다.

경찰이나 특수부대 군인들이 받는 위험 및 근무 수당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구분돼 혜택을 받는다. 더욱 경찰이나 군인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정해진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이때 이들이 받는 제복, 제모, 제화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무 수당

공장 등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액이 210만원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한다.

하지만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

또한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 한다.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

근로소득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대상인데,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매월 식사대를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20만원은 비과세되고 초과차액 3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또한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외근로소득 중 최소 월 100만원은 비과세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에는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의 근로제공도 포함되는데,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및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화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2023년 소득세 공제한도

| 구분 | | 총급여 | |
|---------|--------|-----------|-----------|
| | | 7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 | 대중교통 | | |
| | 도서, 공연 | | - |



2023년 연금계좌 세액공제혜택

|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5500만원 (4500만원) 이하 | 5500만원 (4500만원) 초과 |
|-------------------|--------------------------|--------------------------|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 900만원(600만원) | |
| 세액공제율 | 15% | 12% |



확대되는 연말정산 공제 · 감면 혜택

신용카드

| | |
|----------------------------|-----------|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40% → 80% |
| 문화비 · 전통시장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 40 · 50% |

연금계좌

| | |
|---------|---------------|
| 공제한도 확대 | 400만원 → 60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 |
|-------------------------|----|
| 조부모가 손자 ·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 추가 |
|-------------------------|----|

월세

| | |
|-----------------|-----------|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원 → 4억원 |
|-----------------|-----------|

교육비

| | |
|--------------------|-----|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 포함 | 15% |
|--------------------|-----|

고향사랑기부금

| | |
|--------------|-----|
| 기부금액 500만원까지 | 15% |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 | |
|---------|---------------|
| 감면한도 상향 | 150만원 → 200만원 |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 | 코스피 | 코스닥 |
|-------|------------------|--------------|
| 지분 | 1% | 2% |
| 보유 금액 | (현행) 10억원 | (개정) 50억원 |
|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 |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



인간관계에 강해지는 태도 6가지

1. 상대방의 답변이나 사소한 태도로 판단하여 의도를 넘겨짚지 말고 상대방에게 다른 상황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태도로 먼저 이해하려고 애쓰자.
2.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보거나 겪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기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과거에 겪었던 상처와 지금 겪는 사건을 동일시해서 감정을 만들어내곤 한다. 현재에 집중하자.
3. '손해를 봐도 좋다', '싫어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행동해 보자. 그러면 의외로 많은 것이 주어질 수도 있다. 아니, '주어진다'보다는 '돌아온다', '되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른다.
4. 기술이 아니라 솔직함이 무기가 되어야 한다. 약한 면을 숨기고 강한 체하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다. 낙약함을 감추기만 하기보다는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5. 부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감정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하나는 '지금의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쏟아내듯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드러낸 후에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을 모두 표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신'이다.
6.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면 마찰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편이 편하다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게 되고, 어느새 눈치 빠른 사람,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된다. 부딪치고, 상처받고, 노력하고,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자신마저도 온전히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

[약해지지 않는 마음]의 저자 고코로야 진노스케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파견법에 규정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경우는 세액공제 적용되지 아니함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법규법인-5222, 2023.04.12

질 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사용사업주인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사전법규법인-130, 2023.05.17

질 의

- 질의법인은 2022.8월 설립되어 2022.12월에 「연구개발

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

- 질의법인은 2022년에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감면대상사업 외에서만 소득이 발생함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에 감면대상사업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사전법규법인-1213, 2023.01.26

질 의

- 질의법인이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로부터 청구받아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증명서류 구비 방법

회 신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의9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전

가공급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공사로부터 청구받아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해당 부담금을 수취하는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청구서,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규소득-307, 2023.05.25

■ 질 의

- 질의인은 “AAA”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 영업상 필요*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하였으나

* 질의인은 고객 선유치 목적으로 사업개시 전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을 위해 부득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함

- 관할 구청으로부터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아직 발급하지 못한 상태로, 실제 영위할 업종인 “BBBB”이 아닌 “서비스/◇◇◇” 업종으로 ‘22.00.0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 위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2.00.00. “BBBB”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함

질의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상업종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정책과-1206, 2023.05.24

■ 질 의

- 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회 신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단지 내 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쉬워지는 양도세 신고... 토지양도까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총 4만 3000명의 납세자에게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가 간단한 확인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4월 건축물 양도를 대상으로 시행해 11월에는 토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이전 양도한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영상이 게재돼 있으며, 안내문 QR코드를 이용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향후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세금 걱정 없는 수출길 확보... 이중과세 125건 해결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1~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납세자들은 해외 현지 및 국내에서 소득을 두 번 신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번 냈던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부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과세당국들은 현지 진출한 기업들이 계열사 간 거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조정해 특정 국가에 이익을 몰아줘 현지의 과세를 회피하는 지를 두고 과세 마찰이 벌어지곤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한국과 해외 과세당국간 이견으로 인해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외 과

세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사전 합의 건수(APA)는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2.8% 증가해 제도 시행 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APA를 승인받은 기업들은 평균 6년 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당국 간 협의를 위해 6월 일본 국세청장 회의를 시작으로 코로나 19로 중단된 대면 국세청장 회의를 재개, 지난 9월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청담회의, 12월 중국 국세청장과의 우리 기업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 측은안심하고 국내외 원활한 투자를 위한 세무 안정성을 제공하고, 세정 외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증여 10%, 저율과세구간 120억원으로 완화

내년부터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이 완화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가업승계 목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종전에는 60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 국세청, 2023. 12

-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법 개정)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

-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 ✓ (연금계좌)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절세 꿀팁)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절세 꿀팁'을 선정하여 알려드리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

- ✓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 → 현금영수증 →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
 -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 ✓ 세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세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 ✓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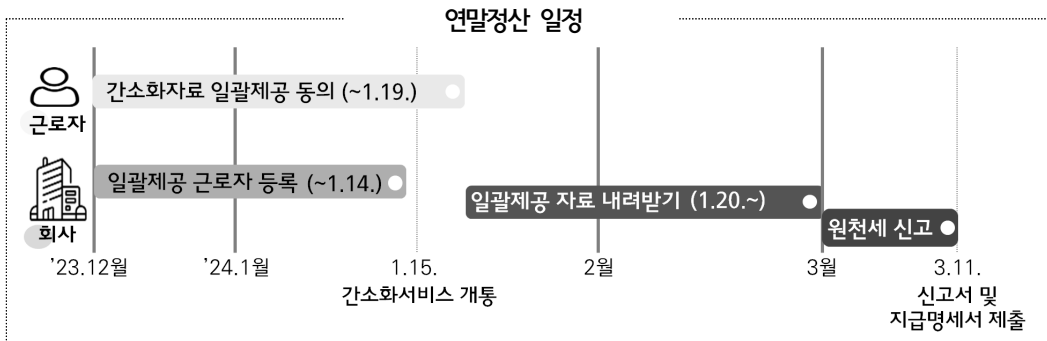
-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지금 챙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②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 세액공제는 ①기부금 → ②보장성 보험료 → ③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하였습니다.
- 아울러,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안내(참고2)해 드려니,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종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1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 * 1.19.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신규 제공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는 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이용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 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
- 또한,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유형을 확인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요 확인 사항

|  근로자 |  회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이행 • 소득·세액공제 증빙(간소화자료 등) 제출 •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여부 등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등록 •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기한 내 제출 |

2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공제항목 | 종전 | '23년 |
|----------------|-----|------------|
| ① 대중교통비 | 40% | 80%(1.1.~) |
| ② 전통시장 | 40% | 50%(4.1.~) |
| ③ 도서·공연·영화관람료* | 30% | 40%(4.1.~) |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1.이후 지출분부터 포함
- 또한 ①, ②, 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②, ③항목만 공제 가능 → 추가한도 200만 원 적용

②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③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 소속 노동조합¹⁾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 ~ 12월²⁾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2)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되었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아래 세법개정 사항은 '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 【참고 4】

- (신용카드)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10%, 10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8천만 원, 연 1,0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15만 원→20만 원)
- (기부금) 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30%→40%)
- (의료비)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요건(7천만 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 (연 240만 원 → 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 (5억 원 → 6억 원), 공제한도 상향 (300만 원 ~ 1,800만 원 → 600만 원 ~ 2,000만 원)

3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①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경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①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택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② 세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세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제외

사례 ①

사회초년생 A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나,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 월세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 세대주인 B와 별도생계를 유지하므로 A도 실제 부담한 월세에 대해 공제 가능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사실 입증 서류

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00% 활용하기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 ▶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 (청년 90%)를 감면 (연 200만원 한도)

* (감면안내 책자)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주요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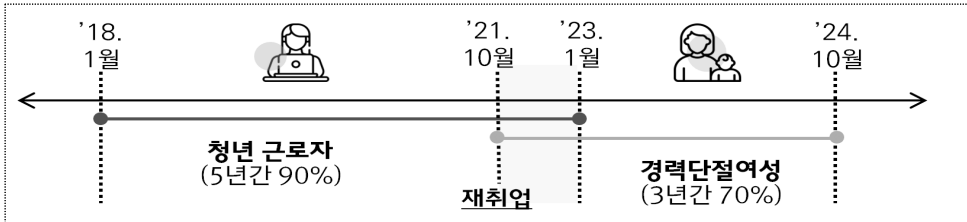
-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최초 감면 적용일 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사례 ②

33세 여성근로자 C가 '18년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간 청년근로자로 90% 감면을 받은 후 출산사유로 퇴직하였음. 이후 '23년 ◇◇기업과 동일업종인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으로 감면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 적용 가능



- (이직한 근로자)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③

청년근로자 D는 □□중소기업에 5년간('18~'22) 근무하다 '23년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였고, □□중소기업 근무 시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였음

☞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인 감면기간을 놓쳤으나,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을 하면 '23년부터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음

*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이 아닌 처음 감면신청을 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 (비영리법인 근로자 등)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보건업, 전문서비스업 등 제외)

사례 ④

은퇴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취업한 63세 E는 관리사무소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의 회사가 아니라 생각하고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음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감면 가능

-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공제율이 높은 '21·'22년에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 우선 공제

- '21·'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어 20%(1천만원 초과 35%)가 적용되었고 '23년부터는 15%(30%)가 적용되므로, '21·'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 ⑤

근로자 F는 '21.'22년에 각각 기부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연간 공제한도인 400만원까지만 공제를 적용받고 매년 100만원씩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음. F는 '23년에도 기부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제한도액은 400만원으로 동일함

☞ 먼저 '21.'22년 각각 한도초과액 100만원에 대해 20% 공제율로 공제받고, '23년 지출분 5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해 15% 공제 * 한도 Min(400만원 -200만원, 500만원)

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 드립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기능과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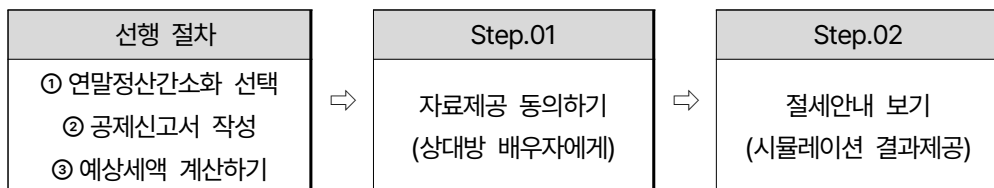
근로자 A는 배우자 B와 각각 연봉 1억 2천만원, 7천만원의 맞벌이 부부로, 부양가족은 자녀 3명과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총 7명임

☞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에 대한 세금 증감액을 확인한 결과,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를 확인하고 가장 세부담이 낮은 사례 1번으로 공제받아 87만원을 절감하였음

* 사례 37 : 근로자·배우자가 당초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에 따른 공제세액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는 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이용절차



* (접근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참고 1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업 무 내 용 | 일 정 |
|---|---------------|
|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등 신고도움자료 배포 * 기업 실무자·근로소득자용 안내 동영상, 자주묻는질문, 계산사례 등 누리집 등재 | 12월 중순~ |
| ·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개시 | '24. 1. 3. |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명단 등록 기한 | 1. 14. |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 1. 15. |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 15.~1. 17. |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공제신고서 작성 및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제공 | 1. 18. |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자 동의 기한 | 1. 19. |
| · 의료비 등 간소화자료 확정 제공 | 1. 20. |
|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 홈택스에서 PDF 또는 XML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 1. 20.~3. 11. |
|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 1월 말(예정) |
| · 기타·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2. 29. |
| · 원천세 연말정산분 신고·납부기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3. 11. |

참고 2 - 대표적 과다공제 유형

| 항목 | 과다공제 사례 |
|----------------------|--|
| ①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
|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 |
| ③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
| ④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
| ⑤ 주택자금 과다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

| | |
|--------------|--|
| ⑥ 교육비 과다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
| ⑦ 의료비 과다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
| ⑧ 기부금 과다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 ○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10.1.이후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일반기부금으로 공제 |
| ⑨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 제외업종(예시):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 대표자의 배우자·최대주주 등 감면대상 아닌 자가 감면 신청 |

* ①~③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참고 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사례

-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23년에 3,480만 원(전통시장 450만 원, 도서·영화관람료 등 33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추가공제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 원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현황]

| (만원) | | | | | | |
|-------|-------|-------------|-------|----------|-------|-----|
| 사용연도 | 신용카드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 | 전통시장 사용액 | | 교통비 |
| 2023년 | 2,500 | 1-3월 | 4-12월 | 1-3월 | 4-12월 | 200 |
| | | 100 | 230* | 150 | 300 | |

* 7.1. 이후 영화관람료 지출분 30만원 포함

-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 소득공제 금액 : 600만 원 (① + 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②

$$(2,500\text{만 원} - 1,750\text{만 원}) \times 15\% + (100\text{만 원} \times 30\% + 230\text{만 원} \times 40\%)$$

(1) 일반 신용카드

(2) 도서·영화 등

$$+ (150\text{만 원} \times 40\% + 300\text{만 원} \times 50\%) + 200\text{만 원} \times 80\% = 604.5\text{만 원}$$

(3) 전통시장

(4) 대중교통



1)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7천만 원) × 25% 2)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공제 한도 (300만 원)

②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 Min [한도초과액(604.5만 원 - 300만 원), (2) + (3) + (4),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추가한도)]

= Min [304.5만 원, 492만 원, 300만 원] = 300만 원

※ 세법개정 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547만 원 (① + 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기본한도)

$$\frac{(2,530\text{만 원} - 1,750\text{만 원}) \times 15\%}{(1) \text{ 일반 신용카드}} + \frac{(300\text{만 원} \times 30\%)}{(2) \text{ 도서·영화 등}} + \frac{(450\text{만 원} \times 40\%)}{(3) \text{ 전통시장}} + \frac{(200\text{만 원} \times 80\%)}{(4) \text{ 대중교통}}$$

* 영화관람료 30만 원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대상 금액

②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247만 원

* Min [한도초과액(547만 원 - 300만 원), (2) 180만 원, 100만 원] + Min [한도초과액(547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3) 90만 원, 100만 원] + Min [한도초과액(547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 90만 원), 160만 원, 100만 원] = 247만 원

참고 4 - '24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 (유의)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①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공제(100만 원 한도)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소법 §52의⑤⑥)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및 기준시가 요건 완화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 | 상환기간 10년 이상 | 상환기간 15년 이상 | |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 1,80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2,000만 원 | 1,800만 원 | 800만 원 | 600만 원 |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7)
 - 납입한도액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④ 영유아 의료비 지원 강화 및 공제대상 확대 (소법 §59의4②, 소령 §118의5①)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 가능
 -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공제 대상 추가
 - * 「장애인활동 지원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등 서비스
- ⑤ 고액기부금 세액공제를 한시 상향 (소법 §59의4)
 - '24.12.31.까지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에 대해 40% 공제를 적용
- ⑥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소법 §59의2)
 - 둘째이상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 원 → 15/20/30만 원
- ⑦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95조의2)
 - *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 (개정)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 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 원 → (개정) 연 월세액 1천만 원

참고 5 - 연말정산 종합안내

《접근 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 신고안내 > 연말정산
- 국세상담센터 누리집(call.nts.go.kr) > 세법 상담정보 > 연말정산

참고 6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접근 경로]

홈택스(PC) >> 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선행 절차] 공제신고서 작성·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총급여, 연금·건강·고용보험료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 후 입력



□ [Step.01] 자료제공 동의하기

-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자료제공에 동의합니다.
-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배우자의 세부적인 공제 금액 등 공제신고서 내역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Step.02] 절세안내 보기

- 아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 7 - 주요 문답자료(FAQ)

[연말정산 방법 1~2]

1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

2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 5월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3월 10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 3~6]

3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소득¹⁾·나이 요건²⁾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2) '63.12.31.이전 출생자
 - 다만,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누나와 동생 모두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누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을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5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30% 공제율)수취 시 신용카드(15% 공제율)보다 절세 효과가 큼

| 구 분 | | 특별세액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 보장성 보험료 |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의료비 |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공제 가능 |
| 교복 구입비 |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 기부금 |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6

전세(또는 월세)로 거주하다가 2023년 중에 주택을 마련한 경우, 기존에 지출한 전세금 이자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23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
- * 국민주택규모(85㎡또는 100㎡)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7~8]

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올해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를 미리 안내할 예정이며, 자녀는 간편하게 모바일로 자료 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8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 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모바일)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 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9~12]

9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변경할 수 있나요?

- 회사가 11월 30일까지 등록한 근로자 명단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12월말 입·퇴사 등으로 인한 최종 근로자 명단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제외·변경이 가능합니다.

10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2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 근로자는 물론 여러 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 개 파일로 분할 압축되어 제공됩니다.(예 A01, A02, A03, A04,)
 - 또한, 대용량 간소화자료를 쉽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용량이 작은 XML 파일 형식으로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 기획재정부, 2023. 12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정부는 '23.12.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2.29.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 원/ℓ)

| 유종 | 인하 전 탄력세율 | '21.11.12. ~ '22.4.30. | '22.5.1. ~ 6.30. | '22.7.1. ~ 12.31. | '23.1.1. ~ '24.2.29. |
|-----------------------|--------------|---------------------------|------------------|-------------------|-------------------------------------|
| | | △20% | △30% | △37% |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
| 휘발유 | 820 | 656(△164) | 573(△247) | 516(△304) | 615(△205) |
| 경유 | 581 | 465(△116) | 407(△174) | 369(△212) | 369(△212) |
| 액화석유 가스 (LPG)부탄 | 203 | 163(△40) | 142(△61) | 130(△73) | 130(△73) |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유가 추이 >

(단위: 원/ℓ)

| | '22년 | '23.1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13 |
|-------------------|-------|-------|-------|-------|-------|-------|-------|-------|-------|-------|-------|-------|-------|
| 휘발유 | 1,813 | 1,563 | 1,578 | 1,592 | 1,641 | 1,629 | 1,581 | 1,585 | 1,717 | 1,769 | 1,776 | 1,684 | 1,603 |
| 경유 | 1,843 | 1,675 | 1,606 | 1,540 | 1,536 | 1,472 | 1,394 | 1,396 | 1,573 | 1,667 | 1,690 | 1,628 | 1,529 |
|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 1,082 | 1,020 | 992 | 989 | 988 | 988 | 961 | 905 | 870 | 895 | 940 | 971 | 971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마찬가지로, 정부는 '23.12.31.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Delta 15\%$) 조치를 '24.6.30.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 >

(단위: 원/kg)

| 구 분 | | 당초 | | 현행 (탄력) | 구 분 | | 당초 | | 현행 (탄력) |
|-------------|------------------|----|-----|------------|-------------|-------------------------------|----|----|------------|
| | | 기본 | 탄력 | | | | 기본 | 탄력 | |
| L N G | 발전용 LNG (일반) | 12 | 12 | 10.2 | 유 연 탄 | 고열량탄 (5,500kcal~) | 46 | 49 | 41.6 |
| | 발전용 LNG (열병합) | 12 | 8.4 | 8.4 | | 중열량탄 (5,000~5,500 kcal) | | 46 | 39.1 |
| | 非발전용 LNG | 60 | 42 | 42 | | 저열량탄 (~5,000kcal) | | 43 | 36.5 |

* 붉은 네모가 이번 연장대상 탄력세율
이번 연장 조치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다.

* LNG(\$/mmbtu), 유연탄(\$/톤) 가격 추이:

L N G: ('19) 5.5 ('20) 4.4 ('21) 18.8 ('22) 34 ('23.7) 11.2 (9) 13.9 (11) 16.2

유연탄: ('19) 77.8 ('20) 60.4 ('21) 138 ('22) 362.8 ('23.7) 134.7 (9) 159.3 (11) 122.2

[후속절차 계획]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15.~12.18.) 및 차관회의(12.21. 예정), 국무회의(12.26. 예정) 등을 거쳐 '24.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2023. 12

- 주요 내용 -

◆ 2023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기말에 감사를 수행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 ✓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 '22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3사업연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 기업은 금감원이 사전예고('23.6월)한 '24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 ✓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I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1 자기책임 下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

규모 불문)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

□ (제출방식)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

*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 및 한국거래소(주권상장법인)로 접수업무 위탁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개요>

| 구분 | 주요 내용 | | |
|------|---|--|---------------|
| 제출의무 | □ 주권상장법인,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 | | |
| 제출대상 | □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 | |
| 제출방식 | □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주권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제출 | | |
| 제출기한 | □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연결포함) 제출기한(=증선위 제출기한) | | |
| | 구분 | 일반회사 | 회생절차 진행회사 |
| | 별도(개별)재무제표 | 정기주총일 6주전* |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
| | 연결 재무제표 | K-IFRS 적용 정기주총일 4주전* K-IFRS 미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 (미제출 사유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 발생

*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위반 및 조치내용) 법규 미숙지 등으로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

* (주권상장법인) ('18년) 49사 → ('19년) 24사 → ('20년) 22사

(비 상 장 법 인) ('18년) 75사 → ('19년) 182사 → ('20년) 140사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조치 현황*>

(단위 : 사)

| 구분 | | | '18년 | '19년 | '20년 |
|--------|--------|----|------|------|------|
| 주권상장법인 | 감사인 지정 | 2년 | - | 1 | 3 |
| | | 1년 | 12 | 4 | 3 |
| | 경고 | | 21 | 13 | 6 |
| | 주의 | | 16 | 5 | 9 |
| | 조치 없음 | | - | 1 | 1 |
| | 위반 계 | | 49 | 24 | 22 |
| 비상장법인 | 감사인 지정 | 2년 | 1 | - | - |
| | | 1년 | 3 | 7 | 10 |
| | 경고 | | 24 | 60 | 36 |
| | 주의 | | 47 | 115 | 94 |
| | 조치 없음 | | - | - | - |
| | 위반 계 | | 75 | 182 | 140 |

* '21·'22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 수준은 '24.1분기 중 확정 예정

* <참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23.5.2. 시행) 관련

- '23년부터 대형비상장법인 기준이 자산총액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되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은 '23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면제
- 다만,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종전 기준(자산총액 1천억원)과 동일한 제출의무 존재

유의사항

- ❑ (기업)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 제고 및 제출기한 준수 노력
- ❑ (외부감사인) 회계감사기준,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사전 준비 철저

- '22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3사업연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23사업연도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은 연결 감사* 대상

- * ('23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29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 ('30년) 모든 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 설계·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하여 내부회계 감사에 충실히 대응할 필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구분 | 설명 | | |
|------|--|---------|---|
| 운영의무 | <input type="checkbox"/>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 | |
| 운영방식 |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가 관리·운영 책임을 지고 내부회계관리자(임원)를 지정하여 운영 | | |
| 검증방법 | 내부 | 대표자 | <input type="checkbox"/> 자체 운영실태 점검(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 | | 감사(위원회) | <input type="checkbox"/> 운영실태 평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 | 외부 | 외부감사인 | <input type="checkbox"/> 효과성 검증(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

*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 ☐ 특히, 최근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

* '24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을 기술하고 공시해야 함

유의사항

- ➡ (기업)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점검 철저
- ➡ (외부감사인) 감사 절차를 수행할 때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에 유의

3 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 강화

■ 기업은 금감원이 사전예고('23.6월)한 '24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 금감원은 심사감리사제 및 외부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감안하여 '24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23.6월)

* 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② 전환사채(CB) 콜옵션, ③ 장기공사수익, ④ 우발부채 공시

○ '2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예정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 ❶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
- ❷ (전환사채 콜옵션)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석공시('22.5.4.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 참조)
- ❸ (장기공사수익) 진행기준 적용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진행률을 측정하는 한편, 추가 공시 요구사항(매출액 5% 이상 계약에 대한 진행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❹ (우발부채 공시)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

유의사항

- ▶ (공통) 필요시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 강화 필요

4 회계오류 최소화, 사후발견시 즉시 정정

■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계오류 예방·정정) 회계오류 발견 시 기업은 오류의 성격 등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고,
- 외부감사인인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
 - *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 조사 후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증선위 및 외부감사인에게 조사 결과 등을 제출(「외부감사법」 §22)
 -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충분히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
- (자진정정시 감경)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감경 적용

- (재무제표 정정현황) '22년 131개 주권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379회(재무제표 정정 273회) 정정하였고, 이 중 21개 기업의 감사의견이 변경

유의사항

- ▶ (공통)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 기구가 커뮤니케이션하고,
-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조정협의회*」 조율 절차 진행
* 동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①주요 협의내용, ②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

5 감사의견 관련 공시 철저

-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의견 등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 동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기한 내 기업·증권위 등에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충실히 기재하여 공시
* 주권상장법인, 주권 등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증권별 소유자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자본시장법」 제159조)
○ 특히, 감사의견 표명 근거, 강조사항,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설명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 (참고) 2022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 사업보고서 점검대상 2,919사 중 412사(14.2%)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의견 강조사항,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하지 않았음

유의사항

- ▶ (기업)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외부감사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6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
 -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반복 지적 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제목, 쟁점 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 가능

유의사항

▶ (공통) 회계결산 및 감사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적극 활용

II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유관기관을 통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배포하는 한편, 향후 이행 여부를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

붙임 1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주요 위반 사례

-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 A사는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연결재무제표는 미제출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 B사는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뒤늦게 인지 후 법정기한 후 현금흐름표를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 제출
- 최종 제출 여부 미확인
 - 상장법인 C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 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 미제출

□ 파일 업로드 미완료

- 비상장법인 D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했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 기한 계산 착오

- E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데,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1일 지연하여 제출함

□ 정기주총 시기 변경

- F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서 3월 25(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 제출처 오인

- 상장법인인 G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제출함

□ 법규 인식 미비

- 자산 1천억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인 H사는 新외부감사법을 숙지하지 못해,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무제표를 미제출함

붙임 2 -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A사는 거래처인 B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과 가까운 가족(乙) 및 회사 임원(丙)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B사와의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C사는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
- (이연법인세부채) D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 배당처분·청산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



□ (종속기업투자주식(자산손상) 관련)

- (1) A사는 종속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 지원을 확대하면 재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2) B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회수가능액 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하면서 해당 종속기업으로 이전한 사업부문에 대해 비정상적인 가정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 사용가치가 과대하게 산정되도록 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3) C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시 평가방법 등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공시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연결) 및 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을 과대계상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하고,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 한국회계기준원, 2023. 12

1 개 요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외 4개 기준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외 1개 기준을 개정·공표함

2 주요 내용

가 K-IFRS 제1116호'리스'개정

- (변동리스료가 있는 판매후리스) 해당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사용권자산·리스부채의 후속 측정방식 적용하되
 - 계속보유 사용권에 대해서는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리스부채와 리스료를 산정하고, 이후 그 리스료와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 인식

나 K-IFRS 제1012호'법인세'개정

- (이연법인세 예외와 추가 공시) 필라2 법인세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공시하지 않음(예외 규정 적용 사실은 공시)
 - 관련 법률 시행 전·후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를 추가 공시
 - * (필라2 법률 제정 ~ 효력 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관련 질적·양적 정보(정보를 모르거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과 평가진행 상황 정보)
 -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별도 공시

**다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개정**

-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 공시
 - *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
-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 대신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 각각 관련 정보를 별도로 공시

라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및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개정

- ☐ (현금흐름표)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 ☐ (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공시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로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고 위험집중에 대한 양적 공시의 예시로 포함

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개정

-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권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하며,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 회계'개정

- ☐ (이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공시하지 않음(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공시)
 - (당기법인세 공시)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별도 공시
 - (당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를 발생기간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신고·납부 회계연도에 비용 인식 가능(예외 규정 적용 사실과 신고·납부 기간 공시)

3 향후 계획

- ☐ (향후계획) 회계기준원은 기준서 개정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예정

붙임 - 개정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

| 구분 | 개정일 | 시행일* | 공표일 |
|---|-------------|------------|--------------|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23. 5. 12 | '24. 1. 1. | '23. 12. 13. |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23. 9. 15 | | |
|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23. 10. 13 | | |
|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 '23. 10. 27 | | |
| 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 '23. 9. 15 | | |
| ⑥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 | | |

*1 조기적용 가능(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제외)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4A, 88A: 개정 내용 공표 즉시 시행,
문단 88B~88D: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2의3, 22.62(1): 개정 내용 공표 즉시 시행

(1) 리스(K-IFRS 제1116호)

- ☐ 변동리스료가 있는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사용권자산·리스부채의 후속 측정방식을 적용하되
 -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리스료 산정(문단 102A)
 - 후속적으로 예상 리스료와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 인식
-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문단 C1D)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부터 소급 적용(문단 C20E)

(2) 법인세(K-IFRS 제1012호)

- ☐ (이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않음(이연법인세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공시)(문단 4A 및 문단 88A)
 - (추가 공시) 법률 시행 전·후로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 추가 공시
 - 필라2 법률 (실질적) 제정~효력 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익스포저 관련 질적·양적 정보(익스포저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 추정 불가 시, 그 사실과 익스포저 평가 진행상황



에 대한 정보 공시)(문단 88C~88D)

-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후: 필라2 법인세에 따른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별도 공시(문단 88B)

□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문단 4A)과 적용 사실 공시(문단 88A)는 공표 즉시 시행하고 소급 적용

-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 추가 공시(문단 88B~88D)는 2023.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2023년 중간기간 공시 불필요

(3) 재무제표 표시(K-IFRS 제1001호)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문단 한138.6(1)~(3))

*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

- (직접 보유) 공정가치 정보, 관련 위험,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
- (고객 대신 보유) 공정가치 정보, 위탁자산 보관에 대한 정보 공시
- (발행) '가상자산 매각' 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이행상황, 수익인식 시기 등 공시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소급 적용(문단 한139.4)

(4) 현금흐름표와 금융상품: 공시(K-IFRS 제1007호, 제1107호)

□ (현금흐름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공시에 공급자금융약정을 구분하여 공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참여한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문단 44F~44H)

□ (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공시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로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문단 B11F), 위험집중에 대한 양적 공시의 예시로 포함(문단 IG18A)

□ (시행일) 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제1007호 문단 62~63, 제1107호 문단 44J)

- (경과규정) 각 국가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 도입
 - 개정내용 최초 적용 회계연도 시작일 전에 표시되는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공시 면제
 - 개정내용 최초 적용 회계연도 시작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44H(2)(나)~(다)에

서 요구하는 정보 공시 면제

- 개정내용 최초 적용 회계연도 내 표시하는 중간보고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44F~44H에서 요구하는 정보 공시 면제
 - * 다만, 공시에만 관련되는 개정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특정 경과규정을 제공하지는 않기로 함

(5)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I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권리'의 명확화
 - 유동부채 분류 원칙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 삭제(문단 2.22(3))
 - 부채의 분류는 경영진의 의도나 기대 및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 받지 않음(문단 2.25, 2.27의2)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판단기준 추가, 공시 요구
 - (판단기준) 약정사항이 존재하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판단할 때, 약정 준수시점 고려(문단 2.22의2, 2.22의3)

| 구 분 | 내 용 |
|---------------------------------|--|
| ❶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그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약정사항을 충족* →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존재 * 약정사항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 이후 평가하는 경우 포함 |
| ❷ 보고기간종료일 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 권리 존재 여부 판단 시, 해당 약정사항 충족 여부 미고려 |

- (공시)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년 이내 약정사항 준수를 꾀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 시, 부채의 결제 위험에 관한 정보(문단 2.28의2)
-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 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
-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 구체화
 - (결제) ❶현금 이전, ❷재화나 용역 제공, ❸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문단 2.28의3, 2.28의4)
 - 다만,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조건(예: 전환권 매도)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소급적용

**(6) 법인세회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 (이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않음(이연법인세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공시)(문단 22.2의3, 22.62(1))
 - (당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를 발생기간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 가능(예외 규정 적용 사실과 신고·납부 기간 공시)(문단 22.46의1, 22.62(3))
 - (당기법인세 공시)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을 별도 공시(문단 22.62(2))
-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문단 22.2의3)과 적용 사실 공시(문단 22.62(1))는 공표 즉시 시행하고 소급 적용
 - 당기법인세비용 예외 규정(문단 22.46의1)과 그 밖의 공시(문단 22.62(2)·(3))는 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www.eAnSe.com



세련된 디자인, 알기쉬운 메뉴 체계, 모바일 버전 제공



600여개의 각종 회계·세무·재무 동영상 강의



회계·세무 전문가의 빠르고 정확한 30분 내 Q&A



안세재경저널·세계재경저널 모든 내용 수록

모든 회원은 eAnSe.com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Big4)회계법인과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시 기업의 체크포인트

- 금융감독원, 2023. 12

<주요 내용>

- ◆ 대형회계법인(이하 'Big4')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기업의 체크포인트]

- ✓ 감사보수 협의시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임률 정보 요구
- ✓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감사종료후 감사투입시간 확인
- ✓ 감사계약시 부대비용 지급항목을 명시하고, 지급시 세부명세 수령
- ✓ 외부평가 및 포렌식 요구에는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
- ✓ 외부감사시 약속된 감사참여자(실제 투입인원 전문성(직급 등) 확인

I. 개요

- '23.10.18.(수) 금융감독원은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이하 "Big4")과 함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Big4와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받는 기업이 관련 개선내용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참고) 「금감원과 4대 대형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23.10.18. 보도자료)

II. 관행 개선방안별 기업의 체크포인트

- ① (감사보수정보) Big4는 i)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



를 정보를 제공하고, ii)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 (Check Point) Big4 회계법인과 감사보수 협의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요구하고, 직급별 감사시간, 시간당 임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② (감사보수환급) Big4는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종료후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

⇒ (Check Point) Big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종료 후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여 환급여부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

* 감사투입시간 감소외에 기타 감사보수 증가요인 등도 고려 필요

- ③ (부대비용청구) Big4는 i) 부대비용 청구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ii)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항목은 부대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음

⇒ (Check Point) Big4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시 별도로 지급할 부대비용 항목을 협의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부대비용 지급시 세부명세를 수령하여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④ (외부평가요구) Big4는 i) 외부평가 등 요구시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ii)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

⇒ (Check Point) Big4 회계법인이 특정 계정과목 등에 외부평가를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

* 다만, 기업이 저가의 부실한 외부평가업체를 선임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일부 기관의 평가를 제한할 수 있음

- ⑤ (회계사배정) Big4는 i) 중요 과목(매출, 매출원가 등)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ii)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iii)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

⇒ (Check Point) Big4 회계법인이 감사계약시 제시한 수준에 비해 낮은 전문성을 가진 공인 회계사를 투입하지는 않았는지 실제 투입된 인력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

III.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금번 Big4의 관행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 기업에 부담을 주는 외부감사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